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아동 · 청소년 성교육, 경계를 고민하다

이명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I. 들어가며

성관계(SEX)는 재미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서운 것일까? 신나는 일일까? 공포스러운 일일까? 짜릿한 것일까? 아픈 것일까? 도대체 무슨 느낌일까? 등... 최근 아동·청소년에게 성관계(SEX)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제부터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 성교육에서 전통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이 다시금 우리 앞에 다가왔다. 어린이들에게 성관계(SEX)를 ‘즐겁고, 신나는 일’이라고 표현한 외국의 번역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기성애화’를 부추긴다고 염려를 하는 학부모들의 문제제기¹⁾ 그리고 이에 대한 양육자들의 성교육 경험과 논쟁들이 다시금 아동·청소년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민하게 했다.

2019년 멕시코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성건강학

회(Word Association Sexual health)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성적 즐거움(쾌락)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했다.²⁾ 이 선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간에 게 있어 성적인 즐거움은 생각, 환상, 꿈, 감정, 느낌을 포함하여 에로틱한 경험에서 파생된 신체적 또는 심리적 만족과 쾌락이다. 자기결정, 동의, 안전, 사생활, 자신감 및 성관계에 있어서 소통하고 협상하는 능력은 성적인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성적인 즐거움은 평등, 차별금지, 자율성 및 신체적 온전성, 건강과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권리를 포함한 성적 권리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인간의 성적 즐거움(쾌락)의 경험은 다양하고 타인의 인권과 안녕을 침해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 선언문의

1) 2020년 8월 12일 팬앰마이크 인터넷 신문 팬앰마이크의 보도 이후, ‘반동성애가독교시민연대’ 등 나쁜 교육에 분노하는 학부모전국연대 단체들이 여성가족부 나다움 어린이책 10권에 대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 이어 8월 25일 국민의 힘 김병욱의원에 의해 국회 질의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2) 김원희, 2020, 성적 즐거움에 대한 선언 이해와 의미, 대한 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권고 내용 두 번째 항목은 “포괄적인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으로 전 생애에 걸쳐 성적 즐거움이 다양한 능력과 요구에 맞춘 정보, 자기결정, 존중과 안전을 경험하기 위해 성적권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 생애에 걸쳐 성적 즐거움이 성적 권리로 접근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성교육의 도입과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성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질문을 마주하며 이 고민을 실천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지금,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위치해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제도적인 성교육 정책의 현실, 성교육전문가들의 난관, ‘폭력예방교육’과 ‘성적권리교육’에서의 경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필자의 성교육 현장 경험과 문헌 등을 참고하여 본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2. 2020년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 성 건강³⁾위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수많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전면적인 학습에 참여하며 그 어느 세대보다 빠르게 디지털 세계로 이행해 가고 있다. 이미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양육자에 의해 규제되었던 초등학교생들의 디지털기기 이용

시간⁴⁾도 온라인 학습을 계기로 온종일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 만큼은 오프라인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미성년자/성인 나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국가, 계급, 계층 등 수많은 장벽은 낮아져 가고 있는 듯 보인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네트워크는 개인적인 관심과 취향, 이에 부합되는 돈(자본)에 의해 구분지어지고 연결되고 확장된다. 한국사회를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소위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은 바로 이러한 디지털 세계의 실체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누군가(여성, 불꽃추적단 등)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 성착취 범죄 지옥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를 구하고자 노력하였고 누군가(남성, 조주빈 등)는 조직적 성착취 범죄 집단의 주동자, 동조자, 단순 가담 소비자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N번방 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의 73%(1,025명)가 10대 남성이라는 현실, 피해자의 62%(408명)가 10대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디지털 세계 역시 오프라인 세계와 다르지 않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젠더기반폭력이 재생산되고 용인되는 젠더불평등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최근 서울시가 (사단법인) 탁틴내일과 함께 실시한 ‘아동·청소년 온라인성범죄 피해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5%였다. 가장 많이 당한 피해는 ‘SNS나 가족, 친구에게 나의 나쁜 점을 알려줬다’(56%)는 협박이었다. 신체사진이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동영상을 보내라는 협박도 17%에 달했는데,

3) 성 건강(Sexual health)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상태를 말하며, 단지 질병, 기능장애 또는 병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 건강은 긍정적이고 존중받는 섹슈얼리티와 성적 관계뿐만 아니라 강압적, 차별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성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성 건강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적 권리에 대한 존중, 보호 충족을 해야 한다(WHO).

4) 서울시·탁틴내일, 2020, 아동·청소년온라인성범죄피해실태조사. 12~19세(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1,607명을 대상.

협박에 못 이겨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경우도 6%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세계로의 진입,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그들에게 안전하고 생산적이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 영역은 무엇에 주목하고 관심 가지며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걸까?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임을 설명하고 있다. 각 국은 성관련 정보와 이미지, 사이버 괴롭힘, 섹스팅(sexting) 등의 현상에 주목하고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을 성교육의 목표로 해야한다고 설명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성적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현실적이며 감정을 고려하며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교육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가속화는 아동·청소년의 성 건강 특히 젠더 기반 폭력에 취약한 여성·청소년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젠더불평등 세계를 영속화시키는 기제가 된다. 그러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포괄적 성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각국에 권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국제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취지의 일부이다.

“포괄적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은 청소년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HIV 및 AIDS 성매개 감염병(STIs), 의도하지 않은 임신, 젠더기반 폭력(GBV) 및 젠더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생산적이며 충만

한 삶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질의 분명하고 강력한 커리큘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적 관계를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다루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많지 않다. 성인기에 접어드는 많은 청소년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모순적, 부정적이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직면하게 되며, 이는 부모나 교사를 포함한 성인들의 당황스러움과 침묵으로 인해 종종 악화되곤 한다. 많은 사회적인 규범이 섹슈얼리티 및 성행동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방해하며, 성관계, 가족계획, 피임법 사용과 관련한 젠더불평등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영속시킬 수 있다.”⁵⁾

3. 사회적인 규범이 성행동에 대한 공개 토론을 방해한다

- ‘2015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

디지털 성착취 소위 텔레그램 N번방사건으로 한창 공분을 사던 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에 대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특히 교육부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2020.4.12)는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성교육 재설계를 안한다’는 기사로 교육부의 무사안일한 ‘성교육표준안’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교육부는 곧바로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⁶⁾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이하 ‘표준안’)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5) UNESCO, 번역: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18, 개정판 국제성교육가이드(p. 12)

6) 교육부 홈페이지, 2020.4., 보도기사 설명자료

학생 발달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교육부의 ‘표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각종 언론에서는 교육부의 성교육 정책, 성(평등)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교육부는 이제 응답하라’, ‘미성년 가해자 늘어 가는데 여전히 피해자 안 되지만 강조’, ‘낮선 이는 피하라는 구시대적 성교육, N번방 씨앗됐다’ 등 성(평등)교육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5년 발표되었던 교육부의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은 2013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종합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성교육의 체계성과 내용성을 갖추기 위해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표방하며 고안되어 추진된 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이 ‘표준안’ 정책은 숱한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동시에 여성·청소년·인권단체들로부터 그 내용이 성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심지어 당시 여당인 국회의원으로 부터도 표준안의 내용이 성차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질타⁷⁾를 받기까지 했다. 이후 교육부 자체의 수차례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은 지속적으로 폐기 또는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 ‘표준안’은 앞에서도 서술했지만 당초 추진 취지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표준안’이 시행되고 나서는 학교 안팎에서 꾸준히 성교육을 실천해왔던 성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검열처럼 활용되거나 순결교육을 주장하는 보수 학부모들의 민원의 소

지가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반동성에 운동 진영의 보수 학부모들은 ‘표준안’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수년간 전문적으로 실시해왔던 교원 연수 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취소하게 하는가 하면 학교 담당교사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학교에 방문한 외부 전문 강사에게 ‘표준안’에 근거해 성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민감한 주제’는 표준안에서 다루지 말라고 했으며 ‘성적자기결정권’, ‘동성애’, ‘자위행위’, ‘야동’ 등은 언급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이 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더라도 다루지 말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쭙보라는 식의 답변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준안’ 정책은 성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질문을 통제하였고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성교육의 내용은 오로지 ‘피해자 되지 않기로서의 성폭력 예방’, ‘금욕과 절제’, ‘남녀 양성의 차이’의 내용만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그렇다고 ‘표준안’ 이전의 학교 성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를 묻는다면 단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표준안’ 이전이나 이후나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은 정규교과 과목이 아니며 성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건 과목을 선택한 일부의 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타 교과 중 일부의 시간을 할애 받아 실시하게 되는 교육이다. 그러다 보니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매년 15차시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나 이는 그저 행정적 지침일 뿐이다. 과연 교육부가 답변한 것처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매년

7)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류지영 의원은 성교육표준안의 내용에 대해 성차별적 요인이라며 질의를 한다. 뿐만 아니라 이후 20대 국회에서 박찬대 의원 또한 문제제기 한다.

15차시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사실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것과 시수 보고 자료의 통계와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감은 거리가 멀다. 오죽하면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혐오가 넘쳐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페미니즘교육을 의무화를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는가?

4.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민감한 주제? - 언제까지 좌충우돌 할 것인가?

교육현장에서 ‘성교육’은 수시로 학부모와 학생의 민원 소재가 된다. 앞에서 서술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 책 보급사업’에 대한 반동성에 진영 학부모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민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즉각 학교에 배포한 책을 수거하는 조치, 문제제기 단체들의 민원을 그대로 받아 질의한 국회의원의 내용에 동의하며 검토를 약속한 교육부장관의 답변은 우리나라의 성교육 정책의 허약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성교육에서의 내용과 표현방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염려와 걱정, 이에 대한 민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서구에서 특히 북미에서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60여년도 더 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말 성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의 단체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추악한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하면서 공격을 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기반 마련으로 성교육에 대한 정보를 집적

시키고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다. 비교적 최근(2017년) 중국에서도 베이징 대학사범대에서 출판한 초등학생용 성교육 교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를 제작한 베이징사범대 출판부는 “‘초·중·고교 건강교육 지도지침’과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9년간 엄격한 설계와 테스트, 피드백, 수정 및 모니터링 단계를 거쳐 교과서를 개발했다”면서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의 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성교육 교재 대상을 확대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성교육 내용의 체계성과 더불어 성교육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며 성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체계도 갖추어 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⁸⁾

다른 한편 일찌감치 성교육을 체계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성교육은 논란 속에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벨기에의 경우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 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간파하며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정책으로 15세 이상의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성교육 사이트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에 대해서 나이에 맞지 않는 노골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주관하는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문화청소년부 장관은 ‘나는 이 사이트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지 않으며 성에 대해 금기시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인터넷 세상에 왜곡된 성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 이 사이트를 먼저 접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유익하다고 확신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⁹⁾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성교육 정책은 국제적인

8) 2020년 11월 WFS(세계성건강협회) 월례 컨퍼런스 “The struggle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round the world”에서 중국 베이징사범대학 Wenli Liu 교수 사례발표. 인자신경과학연구팀과 공조 포괄적성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함.

흐름과 변화하는 청소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취약하게 보이는 것일까?

5. 아동·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법적 장치와 추진 주체 간의 경계

아래의 <표 1>은 국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성교육 관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법률이다.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목표로 법률에 명시된 개념이 ‘존엄한 성보호’, ‘양성평등’, ‘건전 성가치관조성’, ‘성범죄 예방’이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에서 양성평

등 의식 고양과 존엄한 성보호가 성교육의 목표이며 여성가족부는 각급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단체 구성원의 성범죄 및 젠더기반폭력 예방을 위한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에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법률에 따른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추진사업에 대한 두 부처의 추진사업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아동·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인 전국 59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개소 역사는 10년을 훌쩍 넘겼으며 학교에서의 성교육 또한 시수 확보를 하지 못해 고전을

<표 1> 국내 ‘성교육’ 관련 법률들

법률명	내용	소관부처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
학교보건법 (제9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가부
성폭력방지법 (제5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이하 생략)	여가부
성매매방지법 (제5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제4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가부

9) 중앙일보, 2017.10.16., “체위와 테크닉 가르치는 벨기에 성교육 논란”

〈표 2〉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추진사업 비교

구분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 성인권교육(여가부)	성교육(교육부)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험형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한 교육 - 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 59개소 지역에 설치 운영 - 성인권 교육은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강사에 의한 연 10~20차시 교육 * 성인권, 성평등, 관계와 소통, 성적인 위험,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금욕)을 중심으로 심리, 사회, 윤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넓혀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존재로 발달할 수 있도록 구성 - 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처기술, 성행동, 성건강, 사회와 문화로 구성 - 성교육 표준안 제시
교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중·고등학교 / 지역사회 청소년 및 관계자) - 전국 59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연계 성교육 및 폭력에 방교육 실시 ('19년 연인원 230만명 참여) - 성인권교육: 신청 학교(8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초등 고학년 : '19년 166개교 15,365명) - 17개시·도 장애인·아동·청소년('19년 371그룹 2,85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연 15차시 이상 교육부 권고) - 보건을 선택하지 않는 학교는 관련 교과(사회, 윤리 등)에서 개별 차시로 교육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가 사업 총괄 • 시도에서 사업비 50%이상 매칭,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및 지역기관 선정·사업 운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 관리 • 초·중·고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실시

면치 못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성평등선도학교, 성평등실천교사연구모임, 교원단체 여성위원회등은 관련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실천적인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다. 문제는 축적된 현장의 경험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수 있는 성(평등)교육 실행을 위한 통합 법률과 추진체계 강화이다.

6. 나아가며 : 경계를 넘어

20년전 ‘여성주의적 성교육을 위한 모색’이라는 글에서 김현미는 대부분의 성교육지침서들이 성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건강한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왜 쾌락은 배제하는지를 질문하면서 “여성주의 성교육은 여성의 성적 욕망이 중재되거나 규제되는 방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의 정치학은 여성의 성적 쾌락에 대한 의미 부여

와 성에 의한 통제의 모순적 요구를 동시에 이루어 내야 한다.”¹⁰⁾고 하였다.

최근 디지털 성폭력·성착취의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 위치로서 여성들은 성을 즐거움과 쾌락으로서 접하기보다 공포와 무서움으로 체감을 한다.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다. 젠더 기반 폭력의 위험 환경이 ‘보호되어야 할 성’으로서만 간주되면서 여성·아동·청소년에게 과연 무엇을 통제하고 있는지 고민해야한다. 마치 성이 누군가에겐 위험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며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혹은 말하기 부끄러운 금기사항으로 은밀하게만 다루어질 때 그래서 성에 관한 편견 없는 정보로부터 소외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즉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나 자신의 성에 대한 지식, 판단, 결정을 내권한과 책임 아래 가지고 있는 것, 그리하여 몸과 관계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인생을

10) 김신현경(2018), 한국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에서 성에 관한 인식론,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리포트2에서 재인용

살 수 있게 되는 것, 성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삶을 남이 대신 살아 줄 수 없듯이 나의 성은 다른 사람이 대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지각에서 시작된다.¹¹⁾

인권 접근법과 성평등(gender equality)에 기초하며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입각해 학습자중심의 성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는, 즉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최근 국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5월 1일자 동아일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 교육계는 준비돼 있나”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 또한 지난 8월 성희롱·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1년부터 집중학년이수제를 통하여 ‘포괄적 성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성인지 네트워크를 발족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혁신과제로 ‘건강과 재생산권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포괄적 성교육(CSE)을 실시하도록 국제협약을 통해 권고를 하고, 2009년 유네스코가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과 발달단계별 교육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지 10여년이 훌쩍 지났다. 2018년에는 국제유네스코가 중심이 되어 WHO, UNFPA, UNWOMEN, UNICEF, UNAIDS 등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 개정판은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선언 2030 아젠다의 목표 17가지 중 5가지가¹²⁾ 포함된 것이 이를 이루기 위한 필요성에서 발간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지침은 교육자들을 위한 섬세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성교육정책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정부당국의 정책 수립을 돕는, 아동·청소년의 성 건강·복지 위한 성교육을 촉구하는 권고를 뒷받침하는 첨부자료이다.

이제 성교육의 내용과 정책에 있어서 금기와 쾌락의 경계, 보호와 권리의 경계,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교육 정책의 전진이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원희(2020), 성적 즐거움에 대한 선언 이해와 의미, 대한성학회추계학술대회
 김신현경(2016), 한국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에서의 성에 관한 인식론, 아하!성교육리포트2
 김지혜(2016), 십대 성 인권에 대한 국제 규범과 해외 정책 엿보기, 아하!성교육리포트 2
 조영주 외(2018), 청소년성교육 수요 조사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UNESCO(2018),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as sexuality education,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번역

〈참고사이트〉

세계성건강협회 <https://wordsexualheath.net>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교육부 www.mo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1) 김지혜, 2018, 십대 성 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과 해외 정책 엿보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성교육리포트2

12) SDG 3(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SDG 4(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기회 증진) SDG 5(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자어린이에게 권한부여) SDG 10(국가간 불평등해소) SDG 16(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을 제공하여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고, 포괄적인 제도 구축).